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4/ 12 통권 1618호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세금은 반자유적 요소이자 불평등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기업재무제표와 회계·세무조정계산서의 중요숫자  
발췌(표 예시)

###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  
인비용으로 인정됨
-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본회의 통과
- 국세청, 부품 · 소재산업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간  
담회
-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  
공된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23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세요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  
증 가이드선을 제정하였습니다

###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회사가 취득하면 투자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법인배당금 등의 소득귀속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지급시기〉

유형 · 구분	수입시기	지급시기특례
중요쟁점	소득귀속연도 결정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주총 일)년도분	결의일부터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에 징수해야 함
무기명 주식이익	실제 지급받은 날	실제 지급받은 날
출자공동사업자	과세기간 종료일(결산기말)	미지급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연도 3개월 되는 날
각종 수익분배금	실제 지급받은 날	실제 지급받은 날
의제배당 등	감자, 소각일, 탈퇴일	감자, 소각일, 합병등기일 등
법인세신고 처분	사업연도 결산확정일(3/31 등)	사업연도 결산확정일(3/31 등)
펀드 등 이익	실제 지급받은 날, 원본 전입일	실제 지급받은 날, 원본 전입일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8호 / 주간 15호

2023. 04. 12.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 배당금등의 소득귀속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지급시기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기업재무제표와 회계·세무조정계산서의 중요숫자 발췌(표 예시)	2
C E O 에 세 이	세습은 반자유적 요소이자 불평등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기업간 직원 서포팅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 해외고객사에서 소정의 물류비 지원시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 위탁판매수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서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택분 종부세율 현황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9 10
직 장 인 Survival	직장인 영어회화 공부법 첫번째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 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 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 가능 (사전법규재산-1449, 2022.05.18) -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 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 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957, 2022.05.24)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환급금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회사가 취득하면 투자자산으로 보아 통합투 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13
세 무 정 보	-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본회의 통과 - 국세청, 부품 소재산업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간담회	15 28 31 34
회 계 정 보	-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23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세요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드를 제 정하였습니다	36 41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

# 기업재무제표와 회계 · 세무조정계산서의 중요숫자 발췌(excel 표 예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주요항목	금액	계산내역, 과정, 참고사항 등
I. 자산총액	100.0	유동자산+비유동자산등 회사총규모 표상합
(-)부채총액	70.0	외부지급할 금액, 금융부채, 회사채 등
=자기자본	30.0	자산총액-부채총액, 자기자본총실정도표상
불입자본금	15.0	당초불입자본금+증자금액 등의 불입원금
자본잉여금	5.0	배당시 준비금, 감자 합병차손익, 재평가적립금
이익잉여금	10.0	전기잉여금+당기순이익-배당금지급 후 잔액
II. 총매출액	110.0	국내매출+해외수출 등 총 판매액(회사거래규모)
(-)매출원가	60.0	매출수익에 직접.간접 투입된 원부자재+간접비용
(=)매출총이익	50.0	매출에 직접 연동되는 변동비용차감 후 기여이익
(-)판매관리비	30.0	매출과 기업경영을 위한 간접비, 고정비, 관리비용 등
(=)영업이익	20.0	회사의 수익성.잠재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III. 당기순이익	15.0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주로 지급이자)-법인세
(+)익금산입(+)	8.0	익금산입+손금불산입+준비금환입 등
(-)손금산입(-)	7.0	손금산입+익금불산입+준비금전입 등
IV. 세무순이익(=)	16.0	각 사업연도소득-10년내 이월결손금 등-비과세
산출세액	1.6	세무순이익x(2억까지 10%, 2억초과 20% 등 누진세율)x1.1
(-)공제감면	0.9	조특법상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연구개발비, 고용증대 등)
(=)납부할 세액	0.7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최저한세적용)-이월공제
(-)중간예납 등	0.3	6개월 중간예납세액, 기존원천징수된 선납세액
V. 최종납부(=)	0.4	이번 신고 3월 31일 납부할 금액,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세습은 반자유적 요소이자 불평등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윤석열대통령이 당선 전후 ‘자유’를 여러번 외쳤다. 여러 가지 논평이 뒤따랐지만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원래 자유라는 단어만큼 상처투성이인 경우도 드물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칸트의 말이다.

“자연의 핑은 심보를 가서 겨우 한번 모이를 쫓다. 또 백보를 가야 한 번 물을 마시는 부족한 생활을 한다. 그래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새장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장자의 은유다.

“자유는 책임을 의미한다. 이게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버나드 쇼의 쓴소리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네 가지 기본적 자유 위에 세워진 세계를 이루려 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평에서의 자유, 전쟁과 같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다. 그만큼 자유를 얻는 게 힘들다.

원시시대에는 무당 같은 부족장이 다수의 자유를 유린했다. 별과 달의 운행을 점치면서 주술로 병을 고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랬다. 국가 형태가 되자 황제와 공신들이 백성의 고향을 밟았다. 칼과 창을 갖고 있다는 위세였다. 원래 세종대왕처럼 지혜롭고 성실한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확률상 낮은 탓이다.

중세에는 신의 사제들이 인간을 구속했다. ‘살아서는 자유와 평화, 죽어서는 영생’을 약속하였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십자군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그들과 적(?)들을 죽음으로 내 몬 학살극이었다. 죽은 후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헌납(?)해야 했다. 부리가 같으면서도 기독교도들은 유대인을 증오했다. 이로 인해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대인은 죽임을 당했다. 카톨릭 교회가 ‘유대인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1965년에 이르러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6년에 다시 선언한바 있다. 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도 인류

에게 사과했다. 이슬람의 코란에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모두에 대해 부정적 기록이 있다. 하루도 편치 않는 중동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발전은 자유를 한껏 고양시키는 듯 했다. 20세기 한 때 공산주의라는 역풍을 누르고 자유의 시장은 날개를 달고 21세기를 향해 날아올랐다.

그러나 월가의 거품이 일시에 주저앉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인 쌍둥이 적자에도 미국은 이상하게 망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국의 과소비를 신흥국인 중국의 과생산이 떠받쳐 주었다. 그래서 미국의 붕괴는 당연히 중국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러-우크라전쟁통에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에 없던 새로운 공황이 어떻게 다스려질지 불안하기는 매일반이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그것이 그린(Green)이고 환경정화이고 지속성장이다. 교량국가이자 통상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 있다. 투명성 강화만이 살 길이다. 비자금과 CEO라는 막중한 자리의 세습이라는 불투명이 자유의 신장을 가로막고 있다. 오너의 세습을 본따 재벌기업의 노동자들도 노동세습을 하는 판이다. 가관들이다. 세습은 정보의 독점과 기회 독점이라는 반 자유적 요소이면서 불평등이다. 한반도의 북쪽도 마찬가지다. 하루속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환해져야 한다. 한반도 생존조건이기 때문이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31일(금)	4월 3일(월)	4월 4일(화)	4월 5일(수)	4월 6일(목)
미	달 러 (USD)	1303.80	1295.40	1316.30	1310.30	1311.90
일	본 엔 (JPY)	981.44	972.71	995.27	995.03	1001.34
영	국 파 운 드 (GBP)	1614.95	1593.73	1635.11	1638.33	1635.28
캐	나 다 달 러 (CAD)	964.24	959.80	980.01	974.85	975.39
홍	콩 달 러 (HKD)	166.09	165.03	167.73	166.93	167.13
중	국 원 (CNH)	189.13	188.37	191.33	190.12	190.99
유	로 화 (EUR)	1421.53	1401.23	1435.75	1435.83	1431.22
호	주 달 러 (AUD)	874.59	864.74	893.57	885.17	882.12
싱	가 폴 달 러 (SGD)	982.04	971.90	992.05	988.64	987.7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166.09	293.58	297.87	297.39	298.26

## 기업간 직원 서포팅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

- Q** 호텔 간의 요청으로 내부 직원이 일정 기간동안 서포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도급비, 교통비등이 일반적으로 발생 되는데, 비용 청구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각 사업자간의 거래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하지만 직원의 도급비, 교통비등도 동일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A** 직원이 타회사에가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청구하시고 부가세 10% 가산한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Q**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외국법인 국가 : 독일
  2. 파견근로자의 업무 : 납품하는 설비에 대한 Supervising(시운전, 사용법 설명(교육) 등)
  3. 파견예상 기간 : 90일
  4. Supervising 보수 : 135,000 EUR (항공비 및 체류비 포함)
- [문의]
1. 독립적 인적소득에 해당되는지?
  2. 원천징수 여부?
  3. 만약 원천징수해야 된다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4. 적용 세율?
- A**
1. 과학기술 및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자로부터 해당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한독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 우선적용에 따라 귀사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Q**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법 46조 8호, 동법 시행령 35조 6항)

이때, 당해 보험이 보장성 보험만 해당하는 것인지,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문의드립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험금이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외고객사에서 소정의 물류비 지원시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Q** 해외 고객사에서 세계유가 급등에 따른 보상으로 소정의 항공운임비를 입금을 해줬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닌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유류대 인상에 따른 항공운임비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탁판매수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서류

**Q** 위탁판매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근거서류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위탁판매수출이 대행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나 영세율매출명세서가 영세율매출 입증서류가 됩니다.

#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 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해외출장이나 지방출장을 가서 지출하는 버스요금 · 택시요금 · 기차요금 · 항공료 등의 교통비와 출장지에서의 식대 · 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가 아닌 출장업무를 수행한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시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물론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어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 교통비 · 숙박비 · 식대 등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불이익도 없애는 방법이다.

♣ 법인46012-3088, 1996.11.6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처리해도 됨

출장비를 법인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도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를 해당 임직원의 비과세 소득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과다한 출장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 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❶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 법인46013-2370, 1998.8.2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도 시외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출장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역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 ♣ 서일-1016, 2005.08.29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주택분 종부세율 현황

-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 12억원으로 상향
- 기본공제  
6억 → 9억원으로 상향(1주택 부부공동명의자 18억원)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표준	(2021~2022년)		개정 (일반세율)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6%	3.6%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 일자리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구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구분	기존	개정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 50% 이상 (상장 30%) 5년 이상 보유	최대주주&지분 40% 이상 (상장 20%) 5년 이상 보유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납부	▶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납부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 •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시 양도세 · 취득세 ·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세 · 취득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 ·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 터 2년 이내 양도 그 외 : 신규 주택 취득일부 터 3년이내 양도</li> <li>종합부동산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부 터 2년 이내</li> </ul>	<p>세목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p> <p>※ 양도세 · 취득세 :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 · 처분시 적용 종부세 :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한 경우도 적용)</p>



## 직장인영어회화 공부법 1

### 자동 조종 장치에 갇히지 마십시오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동 조종 장치"는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거나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stuck on autopilot"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 갇혀 있으면 상황에 맞게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자신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날씨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안다면 가능한 한 동료들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선택입니다.

우선, 항상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지루할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동료 모두 잠시 후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새로운 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동 조종 장치에 갇히지 마십시오!

# 최신 판례 예규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사전법규재산-1449, 2022.05.18

## ■ 질 의

- 갑(子)과 을(母)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공동(지분율: 갑 40%, 을 60%)으로 취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등록한 후 종합부동산 세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음

\* 갑과 을은 별도세대로 전제

- 갑은 '20년 7월 말에 을의 A주택 지분 전체를 증여 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 함

질의

- 기존에 합산배제하고 있는 갑(子), 을(母) 공동명의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으로서, 갑이 '18.9.14. 이후에 을 지분 전체를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

## ■ 회 신

‘갑’과 ‘을’(갑의 母)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 오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갑’이 2018.9.14. 이후에 ‘을’ 지분 전체를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 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국조-5547, 2022.08.22

## ■ 질 의

- 외국법인이 신탁 수익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금액

## ■ 회 신

내국법인(을법인)이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와 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그 일부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일부에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의 수익자로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을 지정하였다가, 갑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외국법인(A법인)이 취득한 후, 해당 신탁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됨에 따라 A법인이 위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회사가 취득하면  
투자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서면법규소득-8157, 2022.10.07

#### 질 의

- 질의인은 '@@.@@월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각각 대출을 받고 차량(8.5톤  
대형화물차, 이하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  
사에 현물출자함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의  
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쟁점차량에 대해 저  
당권을 설정하였으며
- 쟁점차량과 관련한 모든 영업 및 운송행위는 질의  
인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음

질의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  
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  
과-660, 2022.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  
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  
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

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  
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  
(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  
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  
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957, 2022.05.24

#### 질 의

-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과  
D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으로 2  
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  
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  
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환급금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고지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전했다.

### 국세청장, 혁신 중소기업 신고확인 제외... 지원에 역량 집중

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항공기 부품 제조 등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및 경영난 등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 세정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지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으로 줄어...

최장 10년에 달하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7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무 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 달

— 국세청, 2023. 4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직전 과세기간('22.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 · 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 (5.6%↑)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I

### '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



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 7. 1. ~ '22.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 ('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 4. 25.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2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3. 5. 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15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3. 5. 25.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 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3

###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 (5.6%↑)



##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담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4

##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중복환급 방지) 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하였습니다.

## 5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

- ☐

①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②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③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④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⑤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br>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br>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li> <li>-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li> <li>·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li> </ul> </li> </ul> </li> <li>○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li> <li>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li> </ul> </li> <li>○ 이용시간: 4.1.~4.25. 매일 06:00~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li> </ul> </li> </ul>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li> <li>※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동영상자료실</li> </ul>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무실적자</li> <li>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li> </ul> </li> <li>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li> <li>※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동영상자료실</li> </ul>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시간: 2023. 4. 25.(화) 18:00까지</li> <li>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li> </ul>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li> </ul> </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li> </ul> </li> </ul> </li> <li>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ul> </li> <li>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li> </ul> </li> <li>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li> <li>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li> <li>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li> <li>(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li> </ul> </li> <li>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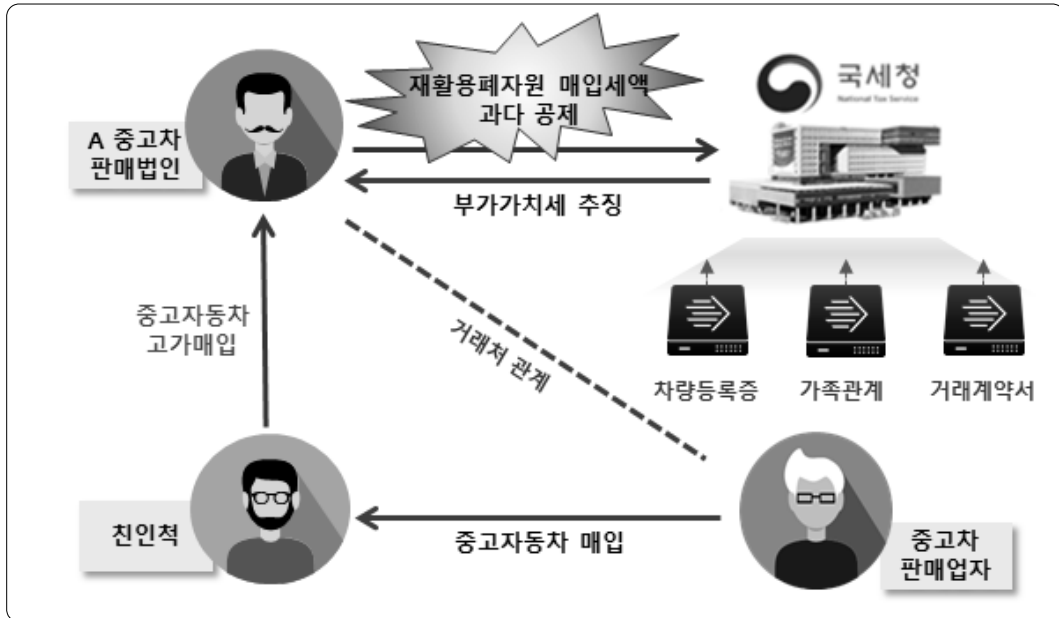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li> </ul> </li> <li>◦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li> </ul> </li> </ul>
-----------------------	---

###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3.4.12	
2		신용카드 매출	23.4.14.	
3		판매·결제대행자료	23.4.17.	
4		현금영수증 매출	23.4.1.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4.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3.4.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3.4.12.	
8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4.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4.14.	
1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3.4.1.	
11		현금영수증 매입	23.4.1.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3.4.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4.1.	
14		재고납부세액	-	확정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4.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4.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4.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4.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4.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신규 제공)	23.4.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4.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4.12.	
28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3.4.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4.15.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 참고 4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사례 1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 □ 확인 결과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과, A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사례 2**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부당한급) 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토지 관련성 및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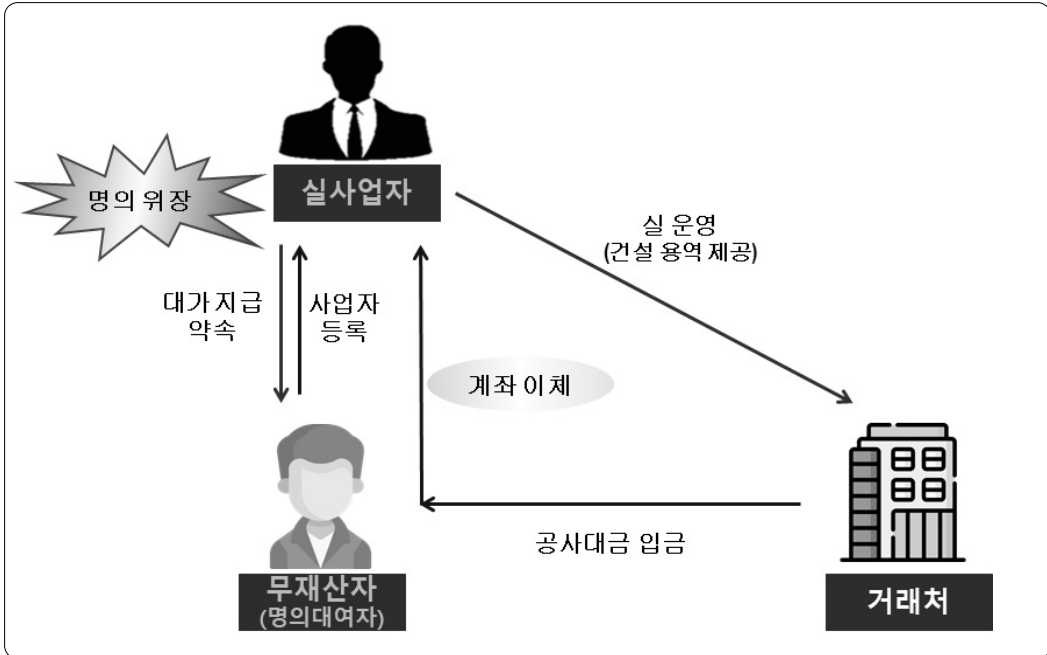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 확인 결과

- 컨설팅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검토한 결과,
  - － B법인은 컨설팅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요트 구입은 요트 대여사업 계획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 요트 대여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사업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 토지 취득 컨설팅 및 요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사례 3**  
(명의위장)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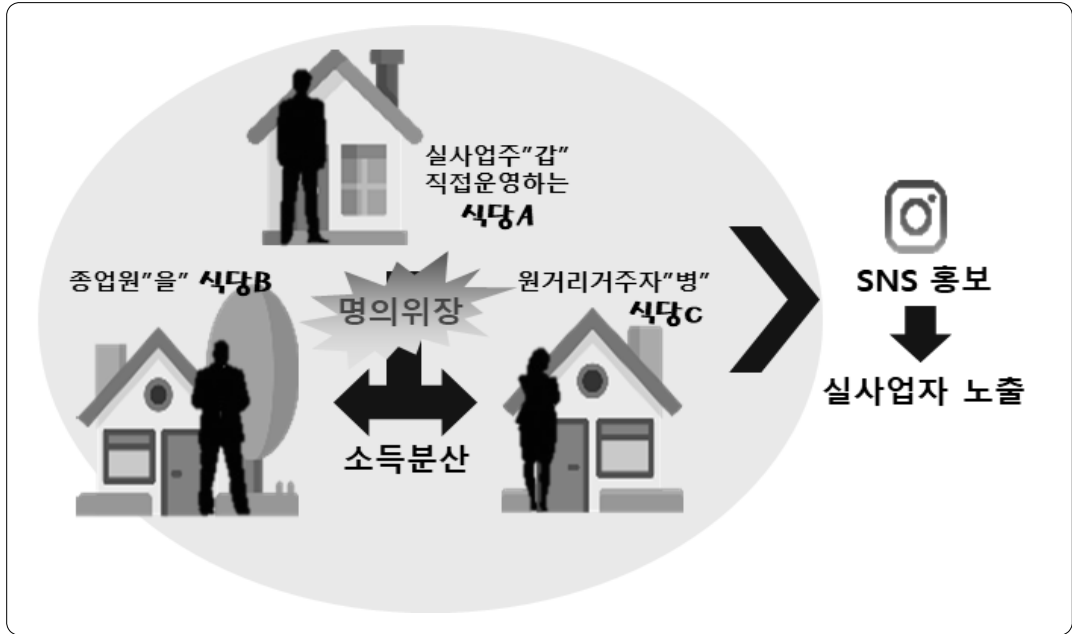
-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 사업자등록을 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 실사업자인 △△△은 ○○○에게 매월 명의대여료 지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고액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 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사업장 또한 폐문부재
  -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사업자가 △△△이며, 매출 대금이 ○○○의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실사업자인 △△△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 · 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4 (명의위장)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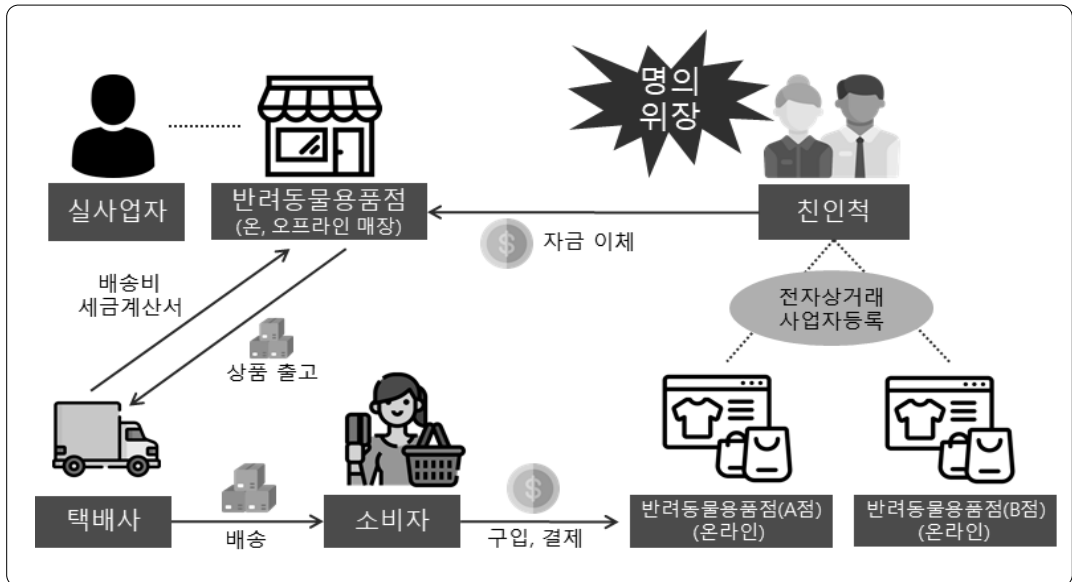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은 상가 밀집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 분산을 위해 종업원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
- □□□의 누리소통망(SNS)에 본인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홍보글과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 납세자 대면 전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 ○○○ 명의 음식점을 □□□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장 운영관리와 관련인 문답 등 면밀히 확인하자 □□□가 실사업자임을 시인

####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5 (명의위장)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	--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자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다수 등록
-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용품 및 택배비 등 매입이 매출 대비 과다하여 고액 환급 발생에 착안
  - －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하여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한 용품이 실사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

####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실사업자 통고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 (조세범처벌법§11)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 － 실제 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국세청, 2023. 4

□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채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

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 |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 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 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 통보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2023.4.3.(월)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 |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

구 분	신청 준비 서류	비고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 신고미납부 국세 ·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출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 복사 · 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1 미납국세열람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개정 2022. 12. 31.>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개정 2023. 2. 28.>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2023. 3

## 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본회의 통과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기업의 조속한 투자 결정을 유도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올해 기업 투자에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 〈 투자세액공제율(%) 〉

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❶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예: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❷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설비투자 전망(한국은행, '23.2.) : 연간 약 △3.1% 감소, 하반기 약 △8.9% 감소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하단 표 참고).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 A기업의 추가 투자분(5천억 원)

	올해('23) 추가 투자 시			내년('24) 추가 투자 시		
	↓			↓		
	'23	'24	전체(2년간)	'23	'24	전체(2년간)
투자규모	1조 5천억	1조	2조 5천억	1조	1조 5천억	2조 5천억
세액공제	1,400억	300억	1,700억	600억	600억	1,200억
총투자액 기본공제	900억 (1조5천억×6%)	300억 (1조×3%)	1,200억	600억 (1조×6%)	450억 (1조5천억×3%)	1,050억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500억 (5천억×10%)	-	500억	-	150억 (5천억×3%)	150억

**A기업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올해 실시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제지원**

\* 연평균 투자규모 1조 원, 추가투자 5천억 원 가정('23~'24년 총 투자규모 2.5조 원)

(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23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반도체(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구 분	우리나라	대 만	미 국	일 본('23.4~)
설비투자	25~35%* * (당기분)15~25% + (증가분)10%	5%	25%	-
R&D비용	30~50%	25%	20%(증가분)	(대)6~10%, (중 소)12%

이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 향후 계획 >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세청, 부품·소재산업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간담회

— 국세청, 2023. 3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월 30일(목)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

○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 〈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3. 3. 30.(목) 오전 10시

▶ 장 소 : 시흥비즈니스센터

▶ 참석자

－ (정부) 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 (산업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주)광진화학, (주)다인정공, 대성기계공업(주), 대정화금(주), 대흥사, 삼안산업 주식회사, 성진세미텍(주), (주)쉴테크, (주)엠케이캠앤티텍, 주식회사 유엔아이

□ 김창기 국세청장은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세청에서 실시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중소기업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23. 2. 24.)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 등 기업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내국세·관세 추가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 아울러,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1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현황

- 개 요
  - (구성) 수도권 인구분산과 산업재배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전문 산업단지로 성장
  - 시화국가산업단지는 '86년~'06년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시화MTV 국가산업단지는 '02년~'23년 조성
  - (특이 사항) 수도권에 위치하여 풍부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기계, 전자부품 등 부품·소재산업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복합단지로 성장
  - \* 주요 업종 : (시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시화MTV) 정밀화학, 신소재, IT 등

- 현 황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 등
  - (단지별 현황)

구 분	시 화	시화MTV
면적(천㎡)	16,121	6,515
입주업체 수(개)	10,769	1,177
고용현황(명)	128,156	14,907
생산액(억원)	360,504	46,012
수출(천불)	5,232,458	960,310

(출처 : '22년 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

#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 금융위원회, 2023. 4

-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25일) 후속조치로,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도입('24년~)을 위한 규정 개정 완료
-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등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 방안에 따르면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①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②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22년말 코스피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 전체 시가총액의 30.8%)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예: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25일)」 中 (별첨 상세 별첨)	
◇ (기본방향)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1단계 의무화 ('24~'25)	<div><input type="checkbox"/>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div> <div><input type="checkbox"/>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 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div> <div><input type="checkbox"/>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div>
2단계 의무화 ('26~)	<div><input type="checkbox"/>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div> <div><input type="checkbox"/>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a) +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div> <div><input type="checkbox"/>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div>
영문공시 지원	<div><input type="checkbox"/> (영문공시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div> <div><input type="checkbox"/>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div>

별첨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월) 中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1 추진 배경

-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및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
- \* 공시제목, 레이블이 실시간으로 영문 자동변환되어 영문 KIND(거래소)에 게시



- '22년중 코스피 상장사(140社, 17.6%)가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 건수는 총 2,453건으로, 국문공시의 약 13.8% (※ '21년 : 9.2%)
- 법정공시도 정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영문 자동번역이 제공되는 수준으로, 여타 정보는 영문정보 부재
-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 영문공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보장이 미흡
- 아시아 주요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홍콩, 싱가포르)하거나 부분\* 의무화(대만)
  - \*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등 영문공시 의무화('19.1.8.)

## 2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 ◆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국내증시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문공시를 활성화
  - ➔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지원방안을 병행

### ◆ (1단계 의무화: '24~'25년)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원~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
  - \* '21년말 기준, 약 106사 (①93사 + ②13사) (총 코스피사의 13%)
  - 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영문정보 수요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의무화 대상으로 선정
  - ➔ ①결산 관련, ②법정공시 공통,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총 82개)
  - \* ① 결산 관련 사항 : 감사보고서 제출, 자본잠식 발생, 주식배당 결정 등
  - ②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 사항 : 유·무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단, 기재내용이 많고 의무 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 영문 요약본 제출)
  - ③ 매매거래정지 수반 주요경영사항 : 상장폐지 결정, 주식 소각·병합 결정 등

-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 (2단계 의무화: '26년~)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21년말 기준, 약 234사 (총 코스피사의 29%)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 α) + 일부 법정공시
- (거래소 공시) 대상항목을 1단계보다 확대
  - (법정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발행 공시(예: 증권신고서)에 대한 영문공시(영문요약본 제출) 의무화 도입
- ※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상장사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8년부터 적용)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 기업의 영문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시행

- 기업의 영문번역 지원
- (인센티브)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우대혜택 부여
  - (영문번역 서비스)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거래소)\*의 참여회사 및 대상서식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확대·개선  
\* '20.9월~'21.9월 56사, '21.9월~'22.12월 108사 참여
  - (교육·홍보) 공시교육 커리큘럼(거래소)에 영문공시 과정을 신설하고, 용어집·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 (영문KIND(거래소)) 영문 자동변환 범위 확대, AI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 (영문DART(금감원))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서식 영문변환 서비스 제공, 영문 재무제표(XBRL) 제공범위 확대\* 등  
\* 비금융업 재무제표 본문 → 비금융업 재무제표 주석 및 금융업 재무제표



## 참고 - 주요 Q&A

### Q.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 영문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오역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제기 리스크임
  - 영문공시는 투자참고용으로, 국·영문 불일치 시 국문이 우선되고 투자판단 前 투자자의 국문공시 확인이 필수\*임
    - \*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상 모든 영문공시에 해당 주의문구 게시 중
  - 다만, 의도적인 오역, 허위공시 등 상장법인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까지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한편, 이번 규정 개정 시 영문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 ※ 국문공시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벌점·제재금 부과,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매매거래정지 등 사안·경중에 따라 다양한 제재 가능
  - 영문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의 명단을 시장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23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3. 4

##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 약 1,190사\*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 \* '22년말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비상장주식회사 약 1,190사 ('21년말 자산기준으로 22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회사가 원활히 신고하도록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대형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3년은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천억원에서 자산 5천억원등\*으로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① & ② 이외 비상장사
  - (개정(안)이 의결·공포전이지만 금융위 후속조치 ('23.1.11. 증선위 보고)에 따라 '23년부터 적용)
  - \*\* 대형비상장회사수 : ('20년) 3,222사 → ('21년) 3,435사 → ('22년) 3,726사 → ('23년) 1,190사 추정
  -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1

##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주요 내용)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상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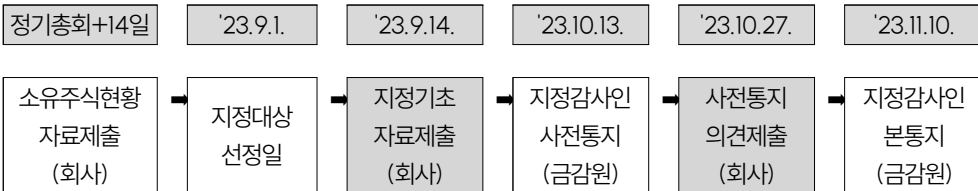
- (목적)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기적 지정제도의 개요

-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택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23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❶공문, ❷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❸대표이사 변동현황, ❹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❺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위반 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 (유의사항)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말기준 자산 5천억원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회사 and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and
- 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대형비상장사 기준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① & ② 이외 비상장사
- ※ 개정(안)이 의결·공포전이지만 금융위 후속조치 ('23.1.11. 증선위 보고)에 따라 '23년부터 적용

\*\*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필요(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4.까지)(외부감사규정 §15③)

####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관련 유의 사항

- ①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 2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 전화문의 : (02) 3145-7761/7975



## 참고 - 제출방법 안내

### 1

#### 첨부서류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3.1.1
2.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5% 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2

#### 제출 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을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2년)” 자료를 참고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드를 제정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3. 4

## 【 주요 내용 】

- (배경) 보험회사는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드」를 제정하였습니다.
- (내용)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 \* 가이드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 확인
  -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I

## 추진 배경

-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 \* Korean - Insurance Capital Standard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보험회사는 '23년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연결산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하여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드스」를 제정하였습니다.

## II

## 외부검증 가이드스 주요 내용

## 1

## K-ICS 외부검증 성격

- (검증 성격)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수행됩니다.
    - \*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 (회계감사 수준)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 2

## 외부검증 대상

- (검증대상)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 가이드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합니다.

- (전문가 활용)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합니다.

### 3 외부검증 정보 이용자

- (감독당국)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참고로 영국에서도 '16년부터 Solvency II를 도입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정보(SFCR\*)에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 4 외부검증 결과

- (의견종류)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4가지(적정,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 \* (한정)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정적) 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의견거절)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핵심감사사항\*)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 \*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을 준용
- 금융감독당국이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이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 III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K-ICS 외부검증 가이드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 감독당국이 외부검증 결과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계획) 가이드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드스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kicpa.or.kr](http://www.kicpa.or.kr)) - 회계·감사 - 감사인증기준 - 기타 수행업무지침

## 붙임

##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드스 세부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서론	- 가이드스의 목적과 범위 - 가이드스의 구성 - 가이드스 활용 시 유의사항
제1장 중요성 결정 및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중요성 결정 -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제2장 주요 항목 감사 체크리스트	I. 총칙 II. 자산 및 부채 평가 III. 지급여력금액 산출 IV.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V. 문서화 요건 VI. 경과조치
제3장 경영진 서면진술서 사례	- 경영진 서면진술서 사례
제4장 감사보고서 사례	- 적정의견 보고서 사례 - 한정의견 보고서 사례 - 부적정의견 보고서 사례 - 의견거절 보고서 사례